

## 5.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30일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-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년 10월 17일),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김정기)

#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역결과 공개 규정을 개선하여 용역 활용도를 높이고,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### ○ 연구결과 공개시점 변경(안 제11조제1항).

- 용역 종료 후 '지체 없이' 공개

### ○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(안 제11조제2항).

-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,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 적시

### 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

## 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정미정)

### ○ 이 개정조례안은

- ▶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<sup>5)</sup>을 반영하여, 용역 결과물 활용도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
### 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▶ 안 제11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두 개의 복수항으로 편제 하였으며,
  - 먼저, 제1항에서는 용역결과의 공개 시점을 국민권익위원회

5) 국민권익위원회 의결(20.8.3.) - 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」 권고  
공정한 과제 선정절차, 연구용역관리체계 정비,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등 3개 분야

권고사항대로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‘지체 없이’ 공개하도록  
현행 규정을 변경하였고,

### 【용역 결과 공개 시점】

현행 규정 (제11조 각 호)	개정안 (제11조제1항 각 호)
<p>용역결과 : 용역종료일부터 <u>1개월 이내</u></p> <p>용역평가 결과 : 평가종료일부터 <u>3개월 이내</u></p> <p>용역 활용상황 : 평가종료일부터 <u>6개월 이내</u></p>	<p>각각 “지체 없이”</p>

- 제2항에서는 용역 결과물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6)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조치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정보공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.

#### ※ 비공개정보의 조치(안 제11조제2항)

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2.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
- 6)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1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2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(5~8호 생략)

- ▶ 그 밖의 안 제6~제7조, 안 제9조 일부 규정은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고,
- ▶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였으며,
- ▶ 안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일로 규정하였음.

## ○ 이 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,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현행 조례 11조에 보면 용역결과, 용역 평가결과, 용역활용상황을 각각 1개월, 3개월, 6개월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?	○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하며, 다만 시민들이 용역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용역 효용성 저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.
○ 개정안에 용역결과 등을 “지체없이”로 변경하였는데 그 의미는?	○ 법률 용어로 “지체없이”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‘정당한 사유없이 때를 늦추는 일이 없이’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.
○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	○ 비공개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 통해 최종 공개여부를 판단하고,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, 일정기간 지나면 공개 시점을 적시하는 등 비공개 요건을 강화 하여 적극적인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.
○ 이번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하는데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는 ‘20.8월에 있었고, 우리 조례도 한차례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는데,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는?	○ ‘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관리체계 등 7개 부분에 대해 권고가 있었음. 이후 지난해 연말 5개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하였으나, 올해 7월에 조례에 반영 못한 2개 부분에 대한 추가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.
○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중에 연구 부정행위 제재방안이 있는데, 실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거나 유사중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적된 바 있는지?	○ 연구부정행위나, 유사중복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문제된 사례가 없으나, 용역결과 활용도 제고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한 부분이고, 이점은 개선 토록 노력하겠음.

## 5. 토론 요지

○ 없 음

#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## 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